【 2016.04.11(월) 강원도민일보 】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추진

도, 공동·하도급 지역업체 우선 수주
지역건설자재 사용 권장사항으로 명기

강원도가 공동도급과 하도급 지역업체 우선 수주,지역건설자재 우선 구매 등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나선다.

강원도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동도급 49%하도급 50% 이상 수주, 지역건설자재 85%이상 구매, 지역장비 및 인력 우선 사용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도는 우선 도내 건설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수주율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공동도급 49%이상 수주와 하도급 50%이상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해 건설·건축공사 입찰공고시 지역업체 참여를 명기하고,개발계획 승인시에도 지역업체 참여를 권장하기로 했다.

또 도내 건설업체 하도급을 위해 지역제한입찰,지역업체 수의계약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건설 자재 80% 이상 구매를 위해서도 건설 관련 인허가시 지역건설자재 사용을 권장사항으로 명기할 방침이다. 설계단계부터 지역 건설자재 사용을 반영하고 지역제한입찰과 지역업체수의계약,지역농공단지 제품 구매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공공구매를 통해 지역자재를 이용하고,지역건설자재 사용 우수기관과 건설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시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말 '강원도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를 제정했다.

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시·군별로 실적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 목표를 달성한 우수 시·군에는 연말에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나 추진실적 목표에 미달한 시·군은 실적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도내 시·군별 지역업체 공동도급과 하도급,지역건설자재 구매 실적을 집계한 결과 공동도급은 평균 88.9%, 하도급은 93.1%,지역생산자재 구매는 85.6%로 기록해 목표를 달성했다. 하지만 지역 생산자재 구매의 경우 춘천시를 비롯해 동해시와 속초시 등 7개 시·군이 목표에 미달했다.

백오인 105in@kado.net

'하도급직불제' 논란 확산

전문건설 환영에 대한건설협·건설노조 반발

속보=정부의 '하도급직불제' 시행을 놓고 건설업계간 의견이 대립되는 등 논란(본지 4월8일자 9면)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공공 발주 공사 대금 16조원을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하려고 하자 전문건설업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원청업체인 대형 건설사들과 건설 노조는 오히려 임금·장비대금 등 체불이 심화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사회적 약자인 건설 근로자와 기계장비업자에 대한 체불 대책도 없이 하도급자만을 위한 직불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도 "하청 건설사가 공사장비 임대료와 임금, 자재대금을 체불하고 도망갈 경우 다단계 구조의 맨 끝에 있는 건설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하도급직불제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며 "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가 사전에 차단돼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까지 도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총 22개 공사에 135억9000여만원으로 절반이상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공사에서 발생했다.

안은복 rio@kado.net